

충남리포트 제214호

ChungNam Report

2016. 3. 23.

충남도 에너지 정제 · 저장시설 입지지역 지원방안

이 민 정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초빙책임연구원, minjoung1006@cni.re.kr

본 연구는 에너지 정제 · 저장시설이 집중된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세제 지원(지역자원시설세) 및 지원금(주변지역 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을 제언하는 것임.

CONTENTS

〈요약〉

1. 석유화학단지 지원의 필요성
2. 대산석유화학단지 소개
3. 대산석유화학단지 지원방안
4. 국외 유사세원의 시사
5. 정책 제언

요약

-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3대 국가기간산업중 하나임.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갖는 과정에서 여수, 울산, 대산의 3대 석유화학단지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하지만 석유화학단지 인근에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주민들은 생활불편, 건강피해, 환경오염,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다른 시설들(예, 발전소, 송변전설비, 폐기물처리 시설 등)이 지역자원시설세, 주변지역 지원제도 등을 통해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반면, 석유화학단지에는 이러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대산석유화학단지는 1988년부터 서산시 독곶리, 대죽리 일원에 조성된 민간 산업단지로 대산5사가 납부하는 국세는 2014년도 4조4362억 원에 달하나 지방세는 398억 원으로 국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특히 대산단지의 경우, 국가공단인 여수·울산단지와 달리 개별공단인 관계로 국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입주기업과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으나 재정력이 낮은 기초지자체가 이를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
- 석유화학단지의 외부불경제 내부화 조치로는 ①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과세 ②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③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 지침 변경 제언 ④서산시 조례제정 등을 들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와의 적극적 공조가 필수.
- 중장기적으로 효율적 자원활용을 위해서는 도(道)의 개입이 가능한 지역 자원시설세를 통한 지원이 바람직함.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석유화학단지 지원의 필요성 ◀

01

-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2013년도 기준 생산액 110조 원, 전체 제조업생산액의 7.3%를 점하는 3대 국가기간산업 중 하나임. 에틸렌 환산 생산능력은 세계 4위를 차지.
 - 석유화학산업이 국가적,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갖는 과정에서 여수, 울산, 대산의 3대 석유화학단지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
- 이러한 국가적 기여의 이면에는 석유화학단지 소재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야기되는 외부불경제와 이에 대한 내부화 장치 미흡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었음. 석유화학단지 인근주민들은 크고 작은 사고들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생활불편, 건강피해,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석유류, 에틸렌, 가연성 액체·가스 등 다양한 위험물을 다량으로 저장·취급하는 석유화학단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중대산업사고’¹⁾라고 정의.

[표 1] 석유화학공장 사고의 3가지 형태

사고형태	발생 가능성	치명 가능성	경제적 손실 가능성
화재	높음	낮음	중간
폭발	중간	중간	높음
누출(독성물질)	낮음	높음	낮음

출처: M&A Protection Consultants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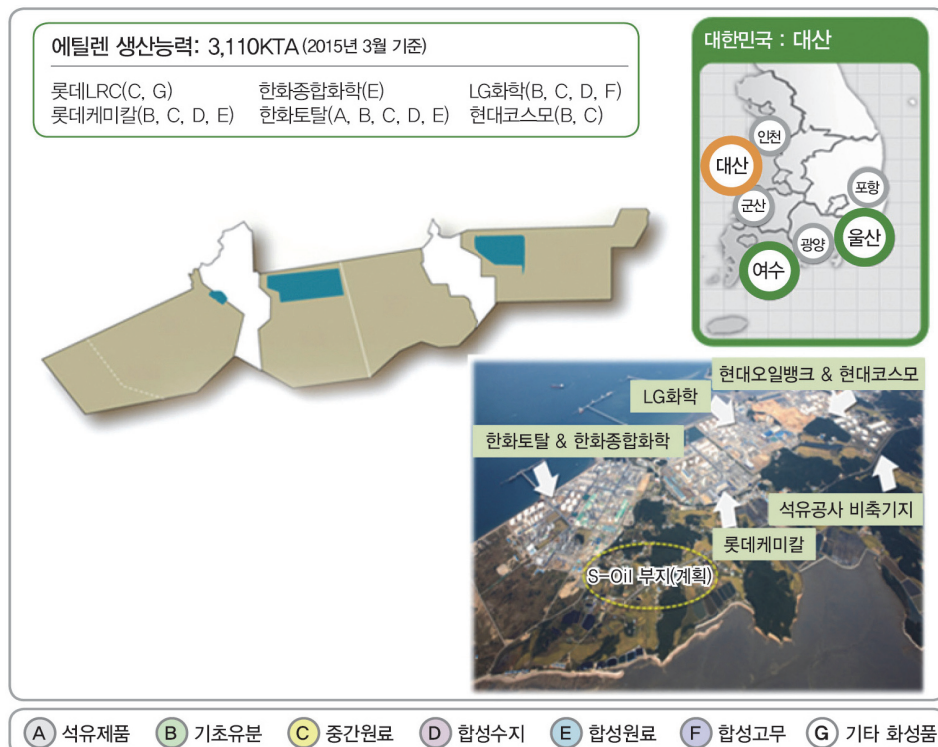
-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다른 시설들(예. 발전소, 송변전설비,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지역자원시설세, 지원금 등을 통해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반면, 석유화학단지에는 이러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1) 중대산업사고 : 산업활동 과정에서 비정상적 상태의 결과로 인한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의 발생으로 단·장기간에 걸쳐 그 영향이 사업장내 근로자 및 인근주민, 환경에까지 미치는 사고

02

▶ 대산석유화학단지 소개

- 대산석유화학단지는 1988년부터 서산시 독곶리, 대죽리 일원에 조성된 민간산업단지.
 - 200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설비증설과 함께 대중국 수출 급성장으로 성장 가속화. 70여개 기업 입주, 종사자 1만5천여 명 규모의 단지로 성장.
 - 대산5사(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케이씨씨)의 연간매출액은 2014년도 기준 41조259억 원에 달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했으며, 석유화학산업의 충남지역 내 출하액 비중(제조업 대비)은 2005년 9.8%에서 2014년 15.7%로 성장
 - 대산5사가 납부한 국세는 2014년도 4조4362억 원에 달하나 지방세 납부는 398억 원에 그쳐 국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 홈페이지를 수정

[그림 1] 대산석유화학단지 개요

- 석유화학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규모도 확대되었으나, 시설폭발, 기름유출, 운송·수송과정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인근주민들은 잠재적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

[표 2]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주요 피해사례

일시	사고경위	주민피해
'92. 2.14	서산 극동정유 분해탑 폭발	반경 1km0내 5백여 주민 대피
'93.10. 1	프런티어 익스프레스호 나프타 유출	주변 157명 구토 및 두통증세 치료
'03.10.16	현대오일뱅크 코크스라인 폭발	정제설비 소실
'07.12. 7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피해청구 127,471건 (4조 2,273억 원)
'09.12.21	현대오일뱅크 부두 기름 유출	병커C유 5,900ℓ 유출
'12. 1. 3	47기 폐유 운반선 폭발	1명 실종, 1명 경상
'14.12.28	탱크로리 전복으로 아스팔트유 유출	아스팔트유 200ℓ 유출
'15. 1.15	실리콘원료 탑재 탱크로리 전복	장시간 교통체증 유발

자료: 정종필(2015)

-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불만도 높음.
 - 국가에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개별공단²⁾이라는 이유로 SOC가 부족하여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기업경쟁력 및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
 -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가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
- 외부불경제 내부화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석유화학 단지에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절실함.

2) 울산과 여수의 석유화학단지는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여 SOC조성, 완충녹지사업 등의 지원이 국가로부터 제공

1)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과세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환경보호 등의 필요재원 확보 및 소방시설, 오물 처리시설, 공공시설의 필요비용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세이자 목적세. 특히, 특정자원분은 특정지역의 부존자원 채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대응을 위해 지역보상차원으로 부과
- 특정자원분은 발전용수, 지하수,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과세 (충남도는 화력 발전에 대해 2014년부터 과세. 2015년 약 360억 원 세수확보)
-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서 취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다양한 조세 및 부담금을 부과하여 외부불경제 내부화 조정을 위해 과세하고 있으나, 실질적 피해를 입는 기초지자체에 돌아오는 세수는 극히 일부분임.
- 정종필(2015)은 에너지정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
- 대산단지 및 보령LNG 비축시설의 연간처리량은 2013년도 기준 2천838만6천m³로 상기 세율을 적용하면 충남은 약 261억 원의 세수확보 예상.

[표 3] 에너지정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대상	천연가스, 원유 및 석유류제품
납세의무자	시·도 내의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사업자
납세지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의 소재지
과세표준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보관된 에너지원의 취급량(생산량, 반입량)
세율	천연가스 취급량(생산량, 반입량) 1m ³ 당 1원 원유 및 석유제품류 취급량(생산량, 반입량) 1ℓ 당 1원

출처: 정종필(2015)

- 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쟁점이 논의될 수 있음.
 - 조세저항 : 석유류에 대해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여기에 추가로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분을 과세한다면 조세저항 발생이 예상됨.

- 이중과세 : 석유류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과세되고 있어, 환경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이중과세 문제 제기가능. (단, 동 세가 2018년까지 존치되는 관계로 2019년부터 과세를 논한다면 회피 가능)
- 과세형평성 : 외부불경제 야기시설에 대해 다른 위험시설물은 배제한 채 석유저장/정제시설만을 거론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2)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 현재 발전소, 송변전설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댐 등에 시행중. 이들 시설을 기준으로 2~5km 이내 지역에 주민복지,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을 시행
- 지원금 산정은 해당시설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발전량, 변전용량, 폐기물량을 이용하며, 재원은 원인제공자 부담(사업자, 배출자) 혹은 국가 및 지자체 예산에서 충당함
-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지원목적은 해당지역 관련시설의 개발촉진 및 시설의 원활한 운용도모, 주민의 수용성 제고에 있음.
- 불투명한 사업 결정과정, 타당성 검증 부실, 회계투명성 확보장치 미비 등 많은 문제점 노정
- 충남도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에 의해 4개 지역(당진, 태안, 보령, 서천)이 지원받고 있음. 2013년도 현재 당진화력 107억 원, 태안화력 123억 원, 보령/신보령화력 120억 원, 서천화력 8억 원 등
-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에 대해 다음사항 고려 필요.
 - 지원금의 목적 : 보상금이 아닌 보조금(향후 더 많은 시설 입지 목적)
 - 도(道)의 개입 : 현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지원사업 결정과정, 심의과정 등이 기초지자체 ↔ 정부의 2단계로 진행되어 도(道)의 개입여지가 없음. 불투명한 사업결정 과정, 회계투명성 문제 등이 지적되는 바, 도(道)의 심의과정을 넣는 3단계 절차 혹은 지역심의위원회에 도 관계자 임회 등을 고려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지침변경 제안

- 석유류에 대한 각종 부담금이 모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임.
- 동 회계에서 석유류의 조달재원 비중이 높음에도, 석유류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 안전 등에 관련된 지출은 매우 저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의 세출항목 지침변경 제안 고려가능
 - 현재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출연 또는 보조, 법인·기관·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에 대한 내용만 언급
 - 세입의 일정부분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서 얻어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세출항목에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입지지역 지원에 대한 내용추가(“에너지 정제·저장시설 입지지역의 법인·기관·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도 충분히 고려가능한 사안임.

4) 서산시 차원의 지원 : 조례 제정

- 가장 가깝게는 대산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서산시 자체의 노력과 지원에 대한 입장을 조례를 통해 밝히는 것도 고려 가능

●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로부터 우리나라의 석유화학단지 지 원방안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일본은 1950년대에 석유화학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에 거대산업화.
- ‘석유비축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에너지대책 특별회계’에서 교부금 지급.

●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 등 교부금 (1978년 통산산업성 고시 제434호)

- 석유저장기지, 제유소, 유조소 등 석유저장시설이 입지한 현(광역지자체), 시정촌(기초지자체), 주변 시정촌에 대해 석탄석유 및 석유대체에너지대책 특별회계에서 교부금 교부
- 석유저장시설 입지는 타 산업 입지에 비해 관련산업이 적고, 입지 시정촌에 있어서는 고용·재정적 측면에 끼치는 이익이 적음
- 하지만, 입지에 따르는 소방력, 방재도로 건설 등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
- 교부금 교부를 통해 시설입지에 따르는 재정부담 경감, 지역경제 발전 및 복지향상에 도모 한다는 목적

[표 3]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 교부금액 산출방법

석유저장시설 저장량 합계량 (단위 : kℓ)	산 식
10만 이상 ~ 100만 미만	$A = 0.495V + 11.55$
100만 이상 ~ 200만 미만	$A = 0.33V + 28.05$
200만 이상 ~ 500만 미만	$A = 0.165V + 61.05$
500만 이상 ~ 1000만 미만	$A = 0.0385V + 124.3$
1000만 이상	$A = 0.0044V + 158.4$

참고) A : 교부금의 교부한도액 (단위 : 백만엔)
V : 석유저장시설 저장량 합계량 (단위 : 만kℓ)

자료: 일본 후쿠시마현(2014)

- 필요한 시설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금액을 보조금으로 교부
 - 교부액 한도는 시정촌에 입지한 석유저장시설 저장량에 따라, 교부규칙에서 정하는 단가와 계수를 곱한 액으로 함(표 3 참조)
 - 도로, 항만, 도시공원, 수도,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시설, 통신시설, 환경위생시설, 교육 문화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국토보전시설, 소방관련시설, 농림수산업관련 공동시설, 상공업 기타산업관련 공동시설 등 15개

- 일본은 교부금 사무절차를 ‘국가-현-시정촌’의 3단계로 추진함.
 - 즉, 입지시정촌은 사업신청, 교부신청, 사업실시 및 경과/결과보고, 지불청구 등을, 현은 시정촌 신청사업 심사, 시정촌 보고내용 수리 및 국가 보고 등을, 국가는 교부액 결정, 교부여부, 사업실적 최종심사 등을 담당
 - 교부금의 대부분은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되고 있음.

- 전국시장회 석유기지지자체협의회에서는 ‘석유기지대책에 관한 제언(2014.7)’에서 석유비축기지에 대해 다음 방법을 주장.
 -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교부금 충실 : 교부시기에 관해 지역실정 반영, 탄력적 운용(유용제한 및 국고보조사업 충당제한 철폐), 교부금 대상사업 확충 등
 - 석유저장시설 안전대책 : 기업에 의한 안전방재대책을 복수년에 걸쳐 지원하는 구조 도입, 동시다발재해 발생시 즉시대응 가능한 체제구축 등,
 - 노후시설 및 안전확보대책에 적극적인 석유사업자 지원체제 마련

- 일본 사례의 시사점
 - 현(광역지자체)을 포함한 3단계 절차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부금 사용의 컨트롤과 효율적 재원 활용 유도 가능
 - 노후시설 및 안전확보대책에 적극 나서도록 석유사업자와 협력을 이끄는 시스템 구축 노력

-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의 관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역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동 시설관련 정보수집, 정책수립 및 집행·관리·감독 등을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중앙 정부 일괄처리보다 상대적으로 행정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문제발생시 신속대응 가능.
 - 따라서, 지역에 소재한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대한 과세는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단지는 지난 30여년 간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국가경제를 위해 지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모습이 대산단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대산단지에서 1년간 납부하는 국세는 4조4천억 원에 달하지만 지방세납부액은 이의 1%에도 미치지 못함.
 - 단지주변 주민들은 환경오염, 교통사고, 잠재적 대형사고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개별산단인 관계로 국가적 대처와 해결책은 전무
 - 유사 위험시설인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지원금을 받고 있고, 충남의 경우 화력발전소에 대해 201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과세하고 있음.

- 대산단지의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4가지를 제안하였음.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과세
 - 위험시설물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지침 변경(「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세출 항목에 석유류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관련 내용 추가)
 - 서산시 조례제정을 통해 서산시 자체의 노력과 지원에 대한 입장 밝히는 노력

- 먼저, 지역자원시설세 신세원으로 발굴 추진시 관련 지자체와의 적극적 공조 추진
 - 서산시 조례제정을 통해 서산시 자체의 노력과 지원에 대한 입장 밝히는 노력
 - 에너지저장·정제시설은 서울시 및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산재
 -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법 개정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추진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입법화 진행 필요

- 둘째, 특별법 제정을 통한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추진시, 지원주체가 정부인지 입지 기업인지 명확히 해야 함.

- 셋째, 도(道)의 개입여지 유무도 중요.
 -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도세이기 때문에 도가 세수활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만,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경우, 도는 사업선정~결산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음.
 - 기 시행중인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주변지역 지원제도가 노정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할 때 도(道)의 개입 여지는 중요.
 -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도입한다면, 일본 사례를 교훈으로 사업 선정·실행의 3단계 절차추진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중앙정부)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효율적 재원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바람직함

이 민 정 초빙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041-840-1172, minjoung1006@cni.re.kr

◆ 참고 자료 ◆

정종필(2015),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 서산시청

일본 후쿠시마현 (2014), 「電源三法交付金制度の概要」

M&A Protection Consultants(1987), “A thirty year review of one hundred of the largest property damage losses in the hydrocarbon-chemical industry”

한국석유화학협회(www.kpia.or.kr)

충남리포트(2015년~현재)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01	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5.01.05
2015-02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신동호	2015.01.13
2015-03	충청남도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전략	박철희	2015.01.26
2015-04	충청남도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특성	최은영 외	2015.02.03
2015-05	충청남도 도서(島嶼) 특성과 발전방향	한상욱	2015.02.12
2015-06	충청남도 행정통·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최은영 외	2015.02.17
2015-07	2015년 충남 GRDP 전망 - GRDP 100조 시대 충남의 새로운 도약	김양중	2015.02.25
2015-08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정준호	2015.03.05
2015-09	신균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	박배균·김동완	2015.03.12
2015-10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조명래	2015.03.20
2015-11	삽교호 수계! 충남형 유역관리방안의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	김영일 외	2015.03.26
2015-12	하구의 생태적 가치!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상진	2015.04.01
2015-13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	강현수	2015.04.10
2015-14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 전력요금의 지역실태 강화 방안 -	이인희	2015.04.16
2015-15	충남의 철강산업 실태와 발전방안	백운성	2015.04.17
2015-16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사공정희	2015.04.22
2015-17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강마아·이관률	2015.04.24
2015-18	충남 “미더유” 현황과 발전전략	권오성	2015.04.29
2015-19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	이상준 외	2015.05.01
2015-20	충남 도민이 꿈꾸는 행복한 성장	김양중·백운성	2015.05.15
2015-21	양봉산업의 의의와 발전가능성	이관률	2015.05.19
2015-22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류진석	2015.05.28
2015-23	과소화·고령화 된 농촌마을,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	조영재	2015.06.05
2015-24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명형남	2015.06.12
2015-25	충남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태 및 성공전략	김종화	2015.06.19
2015-26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	이민정·여형범	2015.06.26
2015-27	충남의 사회적경제, 자산 활용과 시·군 중심 추진이 바람직하다	송두범·박춘섭	2015.07.03
2015-28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방안	이충훈	2015.07.10
2015-29	수소연료전지산업의 최신동향과 충남의 대응 방안	이항구	2015.07.17
2015-30	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로 본 충남의 주거환경정책 추진방향	임준홍·홍성효	2015.07.23
2015-31	현대자동차와 충남의 상생발전 방안	김양중	2015.07.31
2015-32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충남의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책제언	명형남	2015.08.12
2015-33	미국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민관파트너십 사례와 시사점	홍원표·강수현	2015.08.20
2015-34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방안	이관률·송두범	2015.08.27
2015-35	충남의 제조업 중요소생산성 분석	이준표	2015.09.03
2015-36	충청남도 특성에 적합한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이원태·김영일	2015.09.10
2015-37	충청남도 온실가스배출 특성 및 전략적 대응 방향	정종관 외	2015.09.17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38	충남도민의 언론매체 이용 실태와 효율적 정책홍보 방안	박경철	2015.09.22
2015-39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지훈	2015.10.08
2015-40	일본 후쿠오카현의 수소프로젝트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5.10.13
2015-4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방안	임성규 · 정명채	2015.10.22
2015-42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맞춤형 농정혁신모델	김기현	2015.10.27
2015-43	‘도는 도답게’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권선희	2015.10.29
2015-44	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최영화	2015.11.05
2015-45	충남의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현황과 도민 건강 정책 방안	임준홍 · 이경주	2015.11.12
2015-46	중국 관광객(요우커, 遊客)의 충남 유치 전략 마련	박인성	2015.11.16
2015-47	충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김성욱 · 최정석	2015.11.23
2015-48	적극적인 커뮤니티시설 도입을 통해 충남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	이상준	2015.11.27
2015-49	대체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의 정책 방안	김양중	2015.12.03
2015-50	충남 홍동 유기농업의 특징과 과제	김기흥	2015.12.10
2015-51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측정망, 충남 도내 확대가 필요하다!	명형남	2015.12.17
2015-52	한중FTA에 따른 충남 농림어업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구상	강마야	2015.12.20
2015-53	금강의 미래, 금강비전으로 말하다	이상진 · 김영일	2015.12.30
2016-01	행복한 성장을 위한 꿈과 도전, 충남경제비전 2030	강현수 외 2명	2016.01.04
2016-02	공공부문 개혁 요구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	김대호	2016.01.07
2016-03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통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욱 외	2016.01.14
2016-04	금강 중하류의 물 환경 특성과 큰빛이끼벌레 서식에 따른 대응방안	정종관	2016.01.20
2016-05	충청남도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오용준	2016.01.28
2016-06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김용현	2016.02.04
2016-07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윤태범	2016.02.12
2016-08	충청남도 지역경제 생산성의 특징과 정책 과제	이종윤 · 임재영	2016.02.17
2016-09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한상욱 · 임형빈	2016.02.19
2016-10	지역에너지 전환과 충남의 에너지정책 방향	여형범	2016.02.24
2016-11	충남 기초공간데이터 구축을 통한 자연마을 과소고령 실태 분석	윤정미	2016.03.03
2016-12	충남 상생산업단지 정책의 성공전략과 추진과제	장수명 외 2명	2016.03.10
2016-13	충남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정책지원 방안	김태연 외 2명	2016.03.17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